

서울광장·광화문광장 '불법점거' 보수단체들 밀린 변상금 '1억원 이상'

변상금 미납한 보수단체 5곳, 금액 1억888만원에 달해 민주 한병도 의원 "강제 징수 가능한 강도높은 조치 필요"



최근 5년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광화문 광장, 서울광장 근처 등 시민들의 공간을 불법점거한 단체에게 부과된 변상금 미납액이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이 1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까지 총 61건의 불법점거가 있었고 이에 부과된 변상금은 3억429만원이었다.

예수재단, 국민저항본부, 범국민투쟁본부, 육사 총구국동지회 등 일부 보수 단체들은 서울광장 인근과 광화문광장 등의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시로부터 변상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20년 9월 현재 변상금 미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1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한편 미납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2015~2016년, 2018년 동상에 반대 집회를 연 예수재단으로 5,524만원이었다. 다음으로 2017년 서울광장 인근에서 탄핵무효집회를 한 국민저항본부가

변상금 4,653만여원, 올해 광화문광장에 고 백선엽 장군 추모 분향소를 설치한 육사 총구국동지회가 333만여원을 내지 않았다.

이들 3개 보수단체의 미납액만 하더라도 1억5111만원으로 전체 변상금 부과액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올해 전두환 구속 및 불법재산 환수를 촉구한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332만여원),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인 범국민투쟁본부(44만여원)도 내지 않은 변상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일부 단체들이 무단으로 시민의 공간을 점거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수년째 변상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며 "일부 단체는 변상금을 물지 않은 채 또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를 막거나 연체료 징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호상 기자

올해의 '자랑스러운 전북인' 들은 누구?

전북도, 대상 수상자 최종 선정... 혁신 안종욱·경제 성도경씨 등 4명

전북도는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제25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를 15일 최종 선정했다.



혁신 - 안종욱씨



경제 - 성도경씨



문화 - 임양원씨



나눔 - 소순갑씨

나눔대상 수상자 소순갑씨는 청소년 장학사업, 공부방지원과 (사)전북도 인복지효문화연구원 개원 및 총장으로 40년간 효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이날 선정된 수상자는 혁신대상에 안종욱씨 ▲경제대상에 성도경씨 ▲문화대상에 임양원, ▲나눔대상에 소순갑씨 등 4명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올해는 시군 및 기관·단체의 후보자 추천과 병행으로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결과 4개 분야에 총 28명의 후보자가 접수된 가운데 각 분야별 현지조사와 두 번의 심사(예비심사, 본심사)를 걸쳐 최종 각 1명씩 수상자를 선정했다.

혁신대상 수상자 안종욱씨는 (주)올릭스의 대표이사로서 인공태양

광원과 항바이러스 조명 등 LED 특수분야의 자체 혁신기술개발로 수출증대에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경제대상 수상자 성도경씨는 비나텍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1년 전주로 이전해 2019년 대한민국 100대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고용 활성화 공적을 높게 평가받았다.

문화대상 수상자 임양원씨는 (사)전주잡놀이 보존회 대표이사로 1990년부터 전주잡놀이 등 전통 문화 전승육성에 이바지했다.

수상자에게는 오는 23일(예정)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상패와 메달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 훈 행정부지사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각 분야에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고 큰 성과를 내신 한 분에게만 드리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역할을 다하고 계신 훌륭한 도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에 밀린 병역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병역판정검사가 미루어지고 있던 15일 전북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들이 병역 판정을 받고 있다.

특고 노동자, 산재 적용 제외 신청제도로 혜택 못받아

민주 윤준병 의원 "자발적 신청인지 전수조사 필요 입직신고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특고 노동자들이 산재 적용제외의 신청제도로 인해 산재를 당해도 보상을 못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특례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행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입직 미신고 상태에서 특고 노동자에게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현행법에 따라 사업주가 입직신고를 하고 노동자가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입직신고를 안하는 것이 오히려 산재 발생 시 노동자들에게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재가 발생해서 적발되면 사업자에게 과태료와 함께 3년분의 산재보험료를 소급해 징수된다.

현재 특고 노동자의 80%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가 자발적으로 제출되었는지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신청 현황'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평균 60%였지만, C대한통운택배 한 대리점의 경우 택배노동자 41명 전체가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특고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제대로 하면 보상 혜택을 못 받고 법을 위반하면 혜택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고 노동자들에게만 구태어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또 다른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도 현행 산재급여 심사 제도만으로도 충분한 만큼 특고 노동자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 적용제외 신청이 자발적인 신청인지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는 기본 조건인 입직신고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최근 7년간 산사태 취약지구 796% ↑

5년동안 산사태 복구비만 4260억에 달해... 사방댐 예산 감소 민주 이원택 의원 "지도 제작, 인명피해 위험지역 중심으로"



올해 발생한 산사태가 6,175건에 복구비용만 3,3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발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 발생건수가 집계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산사태가 8,779건 발생했고 피해면적은 1,703ha, 복구비용은 4,26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사태 취약지구가 2013년 2,928개소에서 2019년 2만1,238개소로 796%나 증가했음에도 사방댐 설치율은 46.8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방댐 사업예산도 2013년 1,560억원에서 2019년 714억원으로 54% 감소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해 사방사업을 펼쳐왔다.

그러나 올해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 안성, 경북 포항, 경기 가평 등 산지 아래 마을의 경우 사방댐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원택 의원은 "사방댐 하나로 모든 산사태 피해를 예방할 순 없지만 산지 아래마을과 산지 주택가 등에 사방댐 설치를 우선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 "산사태 위험지도 제작시 산사태 흔적도를 표시하고 인명피해 위험지역 중심으로 산사태 위험지도도 시급히 제작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행감 내달 10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로... 도정 등 전방 위법예 대한 제보 접수

전북도의회(의장 송자용)는 오는 11월에 예정된 제377회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매년 도청 및 소속 공기업·출연기관, 교육청 및 소속 기관 등의 사무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다.

이는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와 더불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핵심 권한이다.

조례와 예산을 통해 확정된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는지,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더 나은 방안이 없었는지 확인하며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도청, 교육청)를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고 한다.

전북도가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 수레바퀴가 조화를 이뤄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한다. 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있게 실시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의회는 도민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는 도청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다.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지만 제보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공개될 수 있다.

제보는 도의회 홈페이지(www.assem.jonbuk.kr), 이메일(jst11@korea.kr), 방문 및 우편(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의회 의사당당관실)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의사당당관실(063-280-4254)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도 보건환경연구원

분석능력평가 '우수'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약취, 실내공기질, 토양 분야 숙련도 시험에서 전 항목 '만족' 평가를 받아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서 우수성을 감응받았다.

지난 9월에 실시한 숙련도 시험은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공립 연구기관, 환경 관련 측정분석기관 등을 대상으로 분석능력 향상과 분석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행됐다.

평가항목은 약취 6항목, 실내공기질 7항목, 토양 12항목 등 3개 분야 총 25개 항목이, 보건환경연구원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으로 환경측정분석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았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환복위, 고창 람사르

운곡습지 생태공원 현장 점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15일 고창 람사르 운곡습지를 방문해 생태관광지 조성 추진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근 유스호스텔 점검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내 핵심지역의 인프라 시설로 생태관광 활성화를 기대하며 지난 2월 시범운영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을 중단했다가 최근 재운영에 들어갔다.

이어 위원들은 인근 람사르 운곡습지 생태공원 및 홍보관을 답사하며 현장 확인과 방문객 편의시설 구축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호상 기자

도의회 교육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확인 위해 현장 활동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15일 도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확인을 위해 김제와 군산에서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제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은 김제시와 김제교육지원청이 긴밀하게 소통해 조성을 구상하고 있어 김제시의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이다.

군산도담유치원 다목적체육관은 원생들의 건강증진을 물론 신체발달 프로그램을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신속부지가 적절할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김희수 위원장은 "향후 복합문화공간과 체육관 시설에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진단·치료비로 1400억 지출

이용호 의원 "사회적 비용 최소화 정부·국민 노력 필수"

올해 8월 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금액이 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검사,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8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총 1,031억원, 지자체 등 국가부담금은 34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검사비로는 올해 3월부터 8월까

지 총 564억2,300만원이 지출됐고 이중 건보 부담금은 342억7,900만원, 국가부담금은 221억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가부담금 중 1억5,700만원은 외국인, 보험료 체납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진단검사비로 지출됐다.

입원치료비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814억6,200만원이 지출됐고 이중 건보 부담금은 688억2,200만원으로 84.5%를 차지했으며 국가부담금으로는 126억4,000만원이 지출됐다.

이용호 의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예상치 못했던 국민건강보험 지출이 벌써 1,000억원을 넘어섰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지금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의 꾸준한 노력이 필수적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민주 김수홍 의원,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업 정상화"

작곡 후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던 익산시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재개됐다.

문제가 됐던 오염토는 전량 제거되며 건설예정인 아파트는 353세대 더 늘어나 1,380세대 규모로 들어

서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갑, 기획재정부)은 15일 오전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착공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LH를 설득하고 익산시의 협조를 이끌어냈으며 특히 환경부와 감사원의 유권해석을 받아내도록 뒷받침하며 결국 사업 추진의 불씨를 살려냈다.

/유호상 기자